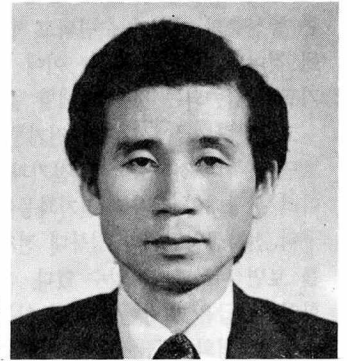


# 정보화사회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崔昌燮  
서강대학교수 · 신문방송학

## I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탈공업사회의 전략적인 자원이며 변동의 주 요인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제 이문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광범위한 영향력과 사회·문화적 충격을 야기시키는 정보의 전달유형은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결정하여야 할 주요 정책 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 체계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인 과정을 밟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참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따르는 제반 사항과 특정 신기술의 도입과 함께 야기되는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여파를 고려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여러부문에서 이미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구성원사이의 의견 교환이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환경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시간적·공간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바 있는데 그 양식은 일반적으로 정책가, 투자자, 운용자, 또는 조정자로서의 정부에 의해 특성지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양식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사회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사람과 재화를 이동케 한 수송부문-도로, 운하, 철도, 항로-이었다. 즉, 대상과 통상로에 의하여 옛날 인간사회의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력의 전달을 위한 에너지 설비-수력, 증기 파이프, 가스, 전기, 기름파이프라인-였다. 즉, 자연의 에너지원보다는 기술적인 에너지원을 동원하여 이를 동력망과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은 조명에 의해 도시생활을 변형시켰을 뿐만 아니라,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자가 제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메시지의 양적 폭발, 감각적 경험의 충격, 점차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인간간의 사회적, 심리적 상호관계의 확대에 관련된 매체로서의 통신수단-처음에는 우편과 신문, 뒤이어 전신과 전화, 지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었다.

이중 첫번째, 두번째의 요인에 비해 세번째에 해당하는 정보산업분야는 그 발전속도나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에서 특히 커다란 관심분야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지식분야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는 두 가지의 경제적·정치적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하나는 구조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인 것이다.

먼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기술적·경제적 조직이 가장 효율적이며, 수용자의 이용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반면 지적인 문제라는 것은 특히 과학기술정보의 보급에 관한 분야로서 필요한 과학기술정보를 다양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기술혁신의 과정을 신속화하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간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일관된 정부정책이나 조직화된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두 가지의 고려사항은 한 사회나 국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문제라고 하겠으며 과연 어느 측면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수립의 주요 착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기술적인 유입에 관한 부문과 기술의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내용에 관한 부문으로 나누어 고려될 수도 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 부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정책구분을 이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신기술의 도입이 지니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인 나

관론과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산물로서 주로 기본 권력구조의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비판적 시각 중의 선택문제라 하겠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현상에 대한 비판은 그 개발과 이용이 소수의 권력집단이나 선진국의 일부 다국적기업의 수중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의 극심한 불균형은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테크놀로지 자체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 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희망은 현재의 불균등한 사회질서에서 탈피하여 국가간 그리고 계층간의 격차, 갈등 그리고 모순이 해소되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막연하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거나 그 사회적·문화적 역기능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관심과 연구를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하여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독점과 집중, 권위주의적 통제, 사회적 힘의 편재에 따른 정보의 불균형 및 문화적 종속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개발이나 도입을 계획할 때 전제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개인 및 집단간의 이해를 돕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수의 기존 권력 계층의 독점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맥블라이드 위원회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방향에 관한 결정은 일반 시민(Public)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기서 시민의 참여는 곧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현 상황에서 그것의 도입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와 시민의 이익과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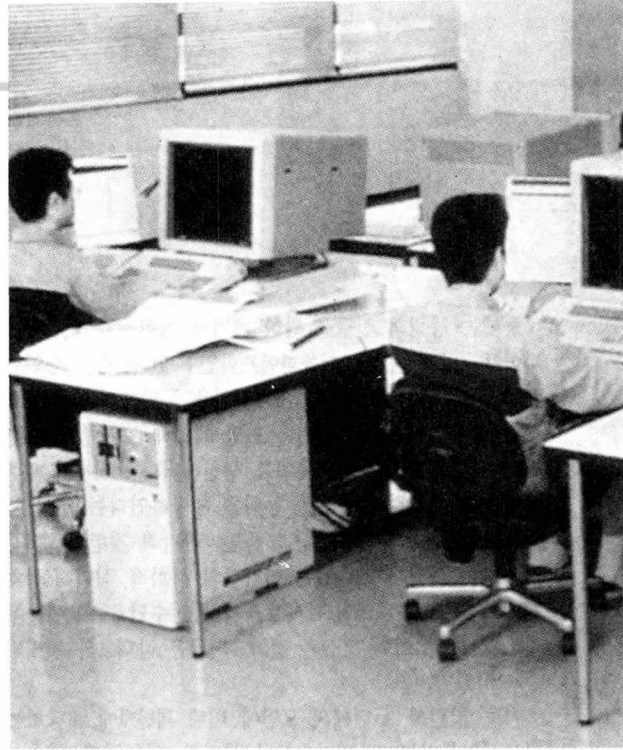
는 의미를 같이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기술관료와 기술전문가들이 빠지기 쉬운 독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결국은 문화적·경제적으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고, 국가의 주권과 정통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들은 각기 특수한 사회·문화적 양식과 조건에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선택해야 하며 선진국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자적인 테크놀로지를 계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선진제국 및 다국적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소유와 이용에 있어서의 균형과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류 전체의 진보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 질서의 토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출현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야말로 인간해방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정책수립을 향한 대안적 전략과 시각(Alternative Strategies and Visions)을 개발하고 탐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적 선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대부분 테크놀로지의 진전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인류 문명의 어려운 문제와 인간의 한계가 극복되리라고 믿어온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다 크고 심각한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지배하고 사용하는 대상물이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이 대다수의 의견과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경우에는 테크놀로지가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이 오히려 커다란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들은 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과 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명론적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의가 특정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요인들을 추려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본 방향을 향해 진전해가는 과정 즉, 구체적인 방법이나 우선순위 등과 같은 부분도 중요하다.

즉, 보다 효율성이 높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위적이고 통제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덜 효율적이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의사 수렴하여 실행에 옮기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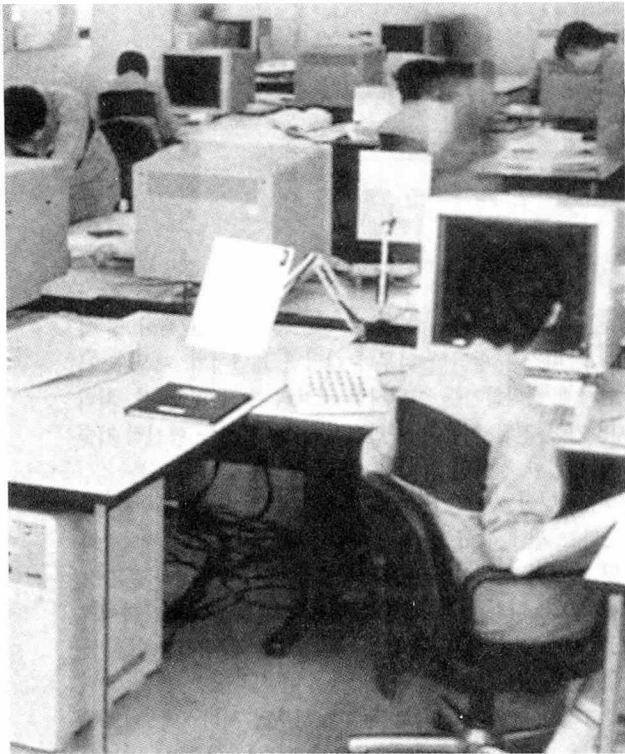
아울러 정책적 대안의 탐색차원도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상황을 고루 고려하는 입장에서 선택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 II

결론적으로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정책방안을 기본 원칙에 입각해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가능한 한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결정사항에 대해 만족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문가들이나 소수의 정책 담당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월주의나 엘리트 주의에서 탈피



“

테크놀로지는 인간이 지배하고 사용하는 대상물이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인간이 대다수의 의견과 이익을 대표하지 않고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될 경우에는 테크놀로지가 지니는 잠재적 가능성이 오히려 커다란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

하여 수용자 중심(사용자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유입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문화적 종속화를 극복하게 될 것이며 진정한 민족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유입정책은 그 영향력이 자국 국민의 내면성과 가치·규범체계에까지 깊이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때의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란 프로그램의 수입·공표이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파에 관한 효과 연구로서 즉시적 효과보다는 누적적인 효과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폭넓은 관련 자료의 수집이나 보관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지나친 외국기술의 도입이나 프로그램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대안은 기술의 국산화능력배양과 프로그램의 자체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문 또한 단시일내에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풍토 조성과 계획성있는 일관된 주제의 연계적 집단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신기술매체의 질적·양적 풍부화로 인해 정보의

접촉면에서 빈·부차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보독점을 막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일곱째, 아울러 정보의 과다접촉으로 인한 소화불능현상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매체를 통한 새로운 내용이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폭증하게 될 때 생겨나는 문화적 충격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충격이 적은 부분부터의 우선순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보의 중앙집중화를 막는 분산화의 일환으로 지방매체 또는 지역매체의 활성화를 이룩해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지방자치체 실시와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인데 민주사회의 기본이념인 다양화, 분권화 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신기술매체의 유입으로 인해 생겨날 지도 모를 제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보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초상권의 침해, 저작권의 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문화적 구조의 변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라는 점에 유의하여 점진적으로는 전체 사회가 민주화되는 방안을 고려하여 동시에 민주적 커뮤니케이션체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